

북한의 두 개 국가 선언의 평가와 전망

김상범*

국문요약

이 글의 목적은 미중 전략적 경쟁과 두 개의 국가 주장의 관련성에 대해서 주목하고, 북한의 선언의 근본적인 목적은 적의 개념화와 적대 이미지 형성, 발전을 통해 최고지도자의 생존에 위협적인 내부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상태로서의 전쟁 연출을 통한 ‘국가재정비(domestic renewal)’ 전략 차원으로 보고 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슈미트의 상태로서의 전쟁은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전시와 평시의 구분이 없는 적대적인 두 국가,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의 상태를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한 인식의 틀을 제공한다.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 교전 중인 적대 국가”라는 발언은 칼 슈미트의 상태로서의 전쟁이라는 명확한 인식을 통해 김정은 시대 대남 총력전을 펼쳐 내부의 위협요인을 제거해 최고지도자의 생존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의 안보를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 위협의 시대에서 안전의 시대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과 함께 하는 국가안보정책의 추구, 즉 관여와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제어: 두 개 국가, 상태로서의 전쟁, 적, 남북관계, 북한, 국가재정비 전략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I. 서론

이 글의 목적은 미중 전략적 경쟁과 두 개의 국가 주장의 관련성에 대해서 주목하고, 북한의 선언의 근본적인 목적은 적의 개념화와 적대 이미지 형성, 발전을 통해 최고지도자의 생존에 위협적인 내부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상태로서의 전쟁 연출을 통한 ‘국가재정비(domestic renewal)’ 전략 차원으로 보고 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2023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및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으로,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의 시정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 “최대의 적국”으로 재규정하였다. ‘동족(the same blood)-적(enemy)’의 관계는 한국전쟁 후 70년간 남북관계의 사고와 행위를 규정하는 이데올로기적 기초였다. 그의 발언은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아니면 절대로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기존 남북관계의 문법을 깨는 것이었기에 남북한 정부 및 국민들 모두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계에서는 북한의 두 개 국가 선언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 적대관에 기반한 통일, 대남노선의 전면적 전환이며,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에서 통일을 포기하는 국가 대 국가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이들 연구는 공통적으로 한반도 내 군사적 대립과 그로 인한 위기 고조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재까지의 연구는 크게 북한의 두 개 국가 선언의 수용 여부(김연철, 1-4) 및 북한의 의도, 목적 및 우리의 대응이라는 두 가지 주제에 집중되어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후자에 집중하고 있으며, 주로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 해소와 생존 공간 확보를 위한 전략 외교의 일환(전봉근, 1-2)’, ‘통일에 대한 수세적, 소극적 입장의 표명(김진하 외, 21-68)’, ‘새로운 대남 군사적 조치(정성장, 1-25, 성기영, 1-8, 하영선·김양규, 1-10)’, ‘체제 결속(평화재단, 1-6, 김상범, 1-4)’, ‘독립된 주권국가로서 4대 세습체제 구축(양무진, 13-22)’, ‘대외적 자율성 확장과 대내적 성과 집증을 위한 장기적 전략(김동엽, 25-35)’ 등이 연구자들의 주 관심사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전 연구들은 예상치 못한 북한의 발표로 인해 현안 대응을 목적으로 한 정책 연구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한 이유로 북한의 두 개 국가 선

언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적’의 개념화와 대적 이미지 형성, 발전에 기반한 남북관계 재설정의 배경과 목적이라는 기본적인 인식에 충실치 못한 아쉬움이 있다. 또한 북한의 두 개 국가 선언의 의도와 목적으로 제시한 안보 딜레마의 경우도 군사적 측면에 초집중하여 북한과 같은 제3세계 독재국가에서 외부적 위협과 같은 수준으로 내부적 위협으로 인한 안보 딜레마가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학문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Brian L. Job, 12-15).

최고지도자의 생존은 안보딜레마 해소의 핵(core)이다. 최고지도자의 생존은 핵, 이데올로기 등 최고지도자의 절대적 리더십 구축과 발전과 관련된 개념이며, 사회주의 체제의 생존은 개혁·개방 등 최고지도자의 생존을 뒷받침하기 위한 하부 개념, 즉 체제 운영 및 발전과 관련된 개념이다(Yongho Kim, 3-11). 본 연구에서는 미중 전략적 경쟁과 두 개의 국가 주장의 관련성에 대해서 주목하고, 북한의 선언의 근본적인 목적은 적의 개념화와 적대 이미지 형성, 발전을 통해 최고지도자의 생존에 위협적인 내부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상태로서의 전쟁 연출을 통한 ‘국가재정비(domestic renewal)’ 전략 차원으로 보고 이를 분석토록 하겠다.

본 연구는 문헌 및 내용 분석 방법을 활용하며, 주 자료는 노동신문이며, 분석대상은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문 및 그와 관련한 국내 연구자료이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칼 슈미트의 ‘행위로서의 전쟁’과 ‘상태로서의 전쟁’의 개념을 차용하여 두 개 국가 선언의 본질을 적대성의 발로와 강화를 전제로 한 총력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겠다. 제3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을 소개하고 제4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발언의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분석하도록 하겠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결론으로 연구의 발견물과 전망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II. 이론적 논의: 칼 슈미트의 ‘상태로서의 전쟁’

분단국의 국가전략은 대내전략과 대외전략과는 또 다른 범주의 통일전략이다(곽인수, 34). 다시 말해 북한의 대남전략, 우리의 대북전략은 자체의 대내외전략과는 또 다른 범주의 통일전략인 셈이다. 이러한 전략의 적용 범

위와 주체는 남한을 넘어서 한반도 전체, 남북 국민 모두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두 개 국가 선언은 본질적으로 분단을 관리하거나 극복하기 위한 국가통일전략으로 규정 가능하다.

북한의 국가적 차원의 통일전략은 본질적으로 북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기 때문에 대남요인은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그 이유는 남한의 정치, 경제를 포함한 전체적 국력과 남한의 국제적 영향력 등은 북한의 노력이나 의지에 의해 쉽게 변화되거나 바꿀 수 있는 요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전체적인 국력도 통일전략을 규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인데 국가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인식과 행위에 따라 그들의 전략의 수단과 방법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종합해보면 대남요인과 북한의 전체적인 국력은 북한의 국가통일전략에 매우 중요한 결정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한 국가의 전략은 해당 국가가 처해있는 구조적 현실을 반영하여 나타날 수밖에 없다. 북한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점증하는 한미의 군사적 위협 및 재해성 기후(기후 변화)를 국가와 인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며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최대의 위협과 장애요인으로 규정한 바 있다(로동신문, 2022/12/27: 4). 북한의 이러한 규정은 최고지도자의 생존이라는 최고 가치와 국가이익이 외부의 위협과 인적, 물질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해가 인재, 내부적 위협이라는 인식을 김정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Benjamin Habib, 387).

당-국가 체제, 즉 집정을 교체할 대안 세력이 없는 북한에서 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구조개혁과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동력은 내부에서 가지고 올 수 밖에 없다. 당이 주도하고 인민이 참여, 동원을 통한 발전, 그 동력을 내부에서 가져오기 위해서는 최고지도자가 당이 관료기관화되는 것을 막고 지속적인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야만 한다. 이것은 일당체제 구조에서 자기 혁신과 개조를 위해 지속적으로 내부 동력을 이끌어내야만 하는 필수불가결의 정치적 요건인 셈이다(장윤미, 156).

북한이 신시대와 전면적 발전이라는 용어를 제시하는 이유는 바로 내부의 동력을 통한 개혁, 그 영역을 전방위로 확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전면 개혁을 위한 통치 전반의 대대적인 재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신시대와 전면적 발전이라는 것은 체제 전체 분야의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변화를 추동하는 힘으로, 이 슬로건은 기존과는 다른 총체적, 중장기적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제공한다. 북한에서 인민은 현실정치에서 당과 최고지도자가 설계한 사회건설을 위해 동원되는 집단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더 좋은 사회를 꿈꾸는 인민대중은 자발적 의지를 통해 공민으로서 역할과 임무를 다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 이 과정에서 국가안보는 최고지도자의 존엄과 체제 안전의 근간이고, 집단적 정체성에 기반한 사회안정은 강대국의 전제이며, 다시 사회안정은 다시 국가안보정책과 연계되어 설계되어 진다(장윤미, 258).

북한이 신시대와 전면적 발전을 주창하면서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인민중심의 사상을 제시한 것은 바로 인민이란 최고지도자가 당·정·군의 관료들을 감독하고 비판하는 주체이자, 동시에 일당체제를 합리화하는 담론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내부의 위협은 간부들의 무능과 그들이 권력을 이용하여 자원을 독점하고 당과 국가의 정책을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이러한 현상이 인민들의 기본적인 수요를 보장해주지 못할 때 공개적으로 표출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적인 두 국가 선언은 한미와의 대결전선을 보다 분명히 하면서 지난 김정은 체제 10년의 업적과 당의 영도를 합리화하고, 정치적 대치의 전선을 외부뿐만 아니라 당과 국가 내부로 돌려 중장기적인 투쟁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현 한반도 상황을 핵전쟁 직전의 상황, 세계 최대의 핵 열점 지대로 규정하고 전례없는 체제 고립과 파괴 활동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북한은 2019년 2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종료되고 동년 11월 북미간 실무협상까지 재개했지만 결렬되자 동년 12월 정면돌파전이라는 미국과의 중장기적 대결전을 선언한 바 있다. 정면대결전은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어 한반도의 안보환경이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을 ‘신냉전’으로 규정하고 이 논리에 맞게 북한의 내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통한 국력 축적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재정비 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했다(전재성, 284). 이것은 당장은 북미대화와 관계 개선보다는 자신의 국력 강화를 통해 변화되는 정세 속에서 중장기적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였다. 이러한 인식은 북한으로 하여금 대내외 뿐만 아니라 국가통일전략도 크게 변화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었다. 한미동맹이라는 최고수위의 동맹행태와 그에 기반한 대북 군사적 위협은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관

계의 상당 기간 교착,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장기적 안목에서 보고 북미와 남북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추구하는 전략을 구상케 만들었다. ‘내부 정비를 통한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면서 향후 더 강력한 핵·미사일 역량과 경제발전을 통한 인민생활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전략은 이러한 총력전의 시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단기적인 남북관계 진전이나 평화체제를 어려울 수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었다(전재성, 287-289).

이러한 상황은 무력충돌의 전면화를 피하면서도 상대에 대한 실효적 영향력 행사, 즉 평화와 전쟁 사이의 과도적이며 중간적인 상태로 간주할 수 있다. 칼 슈미트(Carl Schmitt)는 전쟁을 ‘행위로서의 전쟁(Aktion(action))’과 ‘상태로서의 전쟁(Zustand(statue))’으로 구분하였다. 전자는 군사적 대립 행위가 진행 중인 상태 즉 전투와 작전행동 자체와 그것이 전개되고 있는 전쟁의 상황을 의미하며, 이러한 이유로 더 이상 적을 지목하며 상징할 필요가 없다(카를 슈미트 지음, 김효전·정태호 옮김, 146). 그러나 상태로서의 전쟁은 다르다. 상태로서의 전쟁은 첨예한 적대행위와 전투행위가 종결된 이후 적이 존재하며,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지만 적대적 상황은 고조되거나 유지되는 상황을 의미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개념은 매우 정치적인 개념이며, 또한 본질은 ‘위급한 사태’의 발생과 전개이기 때문에 국가는 여기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카를 슈미트 지음, 김효전·정태호 옮김, 219).

전쟁이 총력전의 형태로 진행된다고 봤을 때, 상태로서의 전쟁에서의 총력전이란 적대성의 발로에 기인하여 순수 군사적인 것을 넘어서 경제, 선전 선동, 도덕적 감정까지도 적과의 대결에 동원되는 것을 말한다. 슈미트는 상태로서의 전쟁은 직접적인 군사충돌보다 더 가혹한 총력전이 될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러므로 상태로서의 전쟁은 적대와 완화가 아니라 강화를 의미한다(오오다케 코지 지음, 윤인로 옮김, 151-153). 슈미트의 상태로서의 전쟁은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전시와 평시의 구분이 없는 적대적인 두 국가,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의 상태를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한 인식의 틀을 제공한다. 본질적으로 칼 슈미트의 상태로서의 전쟁도 국가를 어떻게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인 것이다.

정세 인식 변화에 따라 북한은 2021년 1월 제8차 당 대회에서 농촌건설을 위해 시, 군당 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으며, 동년 3월 제1차 시,

군당 책임비서 강습회를 개최하여 국가재정비 전략의 차원에서 지방발전을 특별히 강조한 바 있다. 이어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현 사회주의애국 청년동맹) 제10차 대회에서 전체 인민이 행복을 누리는 사회주의 강국을 세우고(로동신문, 2021/4/30, 1-2), 앞으로 15년간에 전국의 200여 개 시, 군의 모든 ‘리’들을 다 삼지연시에 꾸리는 농촌 리들의 수준으로, 사회주의 이상촌으로 전변시키자는 것이 당의 구상임을 밝힌 바 있다(로동신문, 2021/5/6: 3). 북한의 이러한 전략은 향후 15년간을 내다보며 2030년 중반까지 지속적인 국방력 강화를 전제로 경제건설을 통한 인민생활 향상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가재정비 전략, 즉 북한식 도광양회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은 내부의 위협에 집단적인 국가정체성을 바탕으로 최고지도자와 엘리트, 인민들 간 ‘완전한 이해(integral coexistence)’의 일치를 시도하고 더 날카로운 형태의 집단주의적 정체성을 형성,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해 보면, 북한은 미중 전략적 경쟁 하 자체 국력을 강화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해서는 소위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2024년은 2023년 한미간 제2차 핵협의그룹(NCG)에서 2024년 중반까지 핵전략 계획 및 운용에 대한 지침, 확장억제 체제 구축을 위해 8월 한미간 역대 최대규모의 연합군사훈련이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2차 NCG는 북한을 남한을 적으로 규정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적에 대한 두려움은 국내적 단결을 추동하여 강력한 국가적 정체성을 강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북한에게 국가적 정체성이란 고대로부터 공유된 유산이 아니라 분단 이후, 특히 한국전쟁 이후부터 형성된 사회주의 집단적 정체성이다. 적의 존재는 북한으로 하여금 자신의 상황이 상식적이지 않고 예외적이라는 정치적 예외주의(political exceptionism)를 강화시켜 수령을 중심으로 한 북한식 집단적 정체성과 이데올로기,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Shoon Kathleen Murray and Jonathan A. Cowden, 456). 국가는 자기 보존을 위해 친구보다는 적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을 중요한 정치적 능력이자 고유의 권한으로 상정하고 있다(성정엽, 57).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살아남는 법을 합법화시키는 정당화(justification)전략이다(César Niño, Lucas d'Auria and Ángela Cristina

Pinto, 269-270). 이 정당화 전략에서 적은 주민을 정치적으로 동원, 국내 문제로부터 관심을 전환, 반체제 요소의 억압, 그리고 국가여론과 의지를 통합하기 위한 명분으로 활용된다(김태현, 120-123). 또한 이 전략은 북한이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자신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한국과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서 북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고유한 권한을 부여한다.

북한이 이데올로기라는 전통과 대남, 대외관계라는 안보 이 두 축을 통해 최고지도자와 체제의 생존을 보장받아왔다는 사실을 통해 봤을 때(Yongho Kim, 3-11),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 개념에 기반한 두 개의 국가론’은 북한 판 대내외 안보정책의 새로운 설계의 결과이다. 그 이유는 바로 북한의 국가통일전략의 핵심은 북한의 국제이자 최고존엄의 상징인 최고지도자의 생존과 그에 기반한 체제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이다(곽인수, 172).

Ⅲ.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및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시정회의 주요 내용

북한은 2023년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국제질서, 동북아 및 한반도 안보 환경의 인식, 평가에 기반해 국가방위력의 강화의 가속화를 핵심으로 하는 대외활동 및 통일·대남 정책의 정책 전환을 선언하였다. 2023년을 총화하고 2024년의 계획을 발표하는 성격의 연말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들의 통일노선과 상반되는 흡수통일을 국책으로 설정, 주적 선포, 외세와 야합하여 정권 붕괴를 노리는 한국과 화해와 통일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였다. 그는 남북관계의 현실을 인정해 “동족,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의 관계로 완전히 고착화되었다”고 주장하며, 당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사업(대남대적사업) 부문의 기구들 정리 및 통일·대남정책 투쟁원칙과 방향 전환을 천명하였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2023년의 마지막 날에 인민군 대연합부대장들을

비롯한 주요 지휘관들을 소집하고 철저한 대적의식과 주권관 확립을 지시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2024년 새해 첫날 최선희 외무상은 리선권 당 통일전선부장이 참여한 가운데 대남기구 폐지 및 근본적인 투쟁원칙, 방향 전환을 위한 해당 부분 관계 일군들과의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내각 부서 장이 당의 부장이 참여한 가운데 협의회를 주관해 진행했다는 것은 향후 통일전선부가 사실상 해체의 수순을 밟을 것이며, 대남 사업은 외무상이 담당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2024년 1월 5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보도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민족, 동족이라는 개념이 인민군대의 인식에서 삭제되었다”고 강조하였으며, 김여정 당 부부장도 “자신들의 방아쇠는 안전장치가 해제되어 있다며, 사소한 도발이라도 걸어올 땐 즉시적인 불세례를 가할 것” 라고 으름장을 놔다.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를 이행하는 북한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1월 12일 북한 대남관계 부분 일군들은 쫓기 모임을 진행하고, 6·15공동실천 북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등 자신들의 대남 단체들을 모두 정리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당 전원회의에서 최초로 언급한 사항을 최고인민회의라는 국가기관에서 확대, 발전시켜 세부적인 지시를 하달하였다. 김 위원장은 2024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공화국의 부흥발전과 인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당면과업에 대하여’라는 제하의 시정연설을 통해 “두 개 국가를 인정한 기초 위에서 우리 공화국의 대남정책을 새롭게 법화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대남 평화통일 기구 폐지 및 전쟁 준비 태세 강화 지시, 북방한계선 등 어떤 경계선도 불인정-주권행사 영역을 합법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조치 강구 지시, 삼천리 금수강산, 8천만겨레,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우리민족끼리, 동족 등 남북을 동족으로 상정한 용어들 정리,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도 철거 지시, 경의선 북측 구간 복구 불능 수준으로 복귀, 접경지역을 철저히 분리하기 위한 단계별 조치 실시를 지시하였다. 더 중요하게도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 최대의 적국으로 헌법에 명기할 것을 지시하였다(로동신문, 2024/1/16, 5-6).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은 김정은 위원장이 ‘조선반도 정세’라는 남북한의 안보환경이 아니라 북한이라는 ‘자국의 안전환경’에 대해서 분리해서 언급하며 적의 개념화와 적의 이미 형성의 필요성 그리고 유사시 전시체제로의 전환을 강조한 부분이다. 이러한 분리 인식은 자국의 가치와 국가 이익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영도에 의한 결과로, 적의 개념이 형성되었음을 말해주는 의미가 있었다.

우리 국가의 안보환경은 완화되기는커녕 악화일로를 기록하였으며 오늘 세계에서 가장 위태한 전쟁발발위험지역으로 되었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이 때없이 뿔어내는 우리의 《정권종말》망발과 함께 공화국주변지역에 상시주둔하다싶이 하는 방대한 핵전략자산, 추종세력을 규합하여 역대 최대규모로 쉬임없이 벌리는 전쟁연습, 미국의 사촉속에 강화되는 일본, 대한민국의 군사적결탁 등은 우리 국가의 안전을 각일각 더욱 엄중하게 해치고 있습니다. 년대와 년대를 이어 지속적으로 감행되고 있는 미국의 거침없는 반공화국대결정책과 그에 무조건적으로 굴종하는 대한민국과 같은 노북국가들의 자멸적망동은 우리 공화국의 적개심을 촉진시키는 한편 군사력강화의 정당한 명분과 압도하는 핵전쟁억제력을 보다 비상히 제고해나가야 할 당위성을 충분히 제공해주고 있습니다(로동신문, 2024/1/16: 5).

각급 인민정권기관들은 일단 유사시에는 즉각에 전시체제로 이행할 수 있는 철저한 대책을 세우며 전민항전을 위한 물질적준비도 빈틈없이 갖추도록 하여야 합니다(로동신문, 2024/1/16: 5).

그렇다면 북한이 당 회의체에서 언급한 대남사업의 노선 전환을 국가 회의체에서 논의를 확대해 구체적인 정책 설계와 방향을 제정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최고지도자와 당의 의지를 법제화의 형태로 관철해 국가적인 정책으로 전환하는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러한 정치과정은 김정은 시대 당에서 노선과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최고인민회의에서 법·제도적 개정을 통해 국가정책으로 공식화하는 패턴의 일환이었다. 이는 본질적으로 단순히 과거에 반복되었던 일회성의 법·제도적 개정이나 행정기구의 변화가 아니라, 통치구조와 방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 목적은 최고지도자의 정책적 의지를 국가기구에 반영해 영도의 대상으로 국가에 대한 지배력을 공식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서 흥미로운 대목은 바로 북한이 남한을 최대의 주적으로 설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발표하는 자리에 앞서 북한은 향후 10년간 매해 20개의 군에 총 200개의 지방공장 건설을 통한 인민생활 향상을 목표로 한 ‘지방발전 20×10정책’을 발표하였다는 점이었다. 북한은 왜 상태로서의 전쟁이라는 대남 총력전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자신들의 최대 약점인 지방도시의 낙후성을 인정하고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중장기적 전략을 발표했을까? 우리는 적대적이고 교전 중인 두 국가관계 선언과의 연관성을 고려해 이 전략의 의도를 판단해야 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

정치와 사상의 나라 북한, 피아 구분이라는 정치성이 강한 고도의 국가통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해 북한체제의 특징상 정치적 연관성에 대한 검토는 상식적이다. 다시 말해, 김정은 위원장의 두 개의 국가선언과 ‘지방발전 20×10정책’의 연관성은 상태로서의 전쟁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제4장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배경 및 분석에서는 이의 연관성과 의미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한다.

IV.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배경 및 분석

먼저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 “교전 중인 적대 국가”라는 발언은 칼 슈미트의 상태로서의 전쟁이라는 명확한 인식을 통해 김정은 시대 대남 총력전을 펼쳐 내부의 위협요인을 제거해 최고지도자의 생존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의 안보를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의 전제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나올 것이라는 인식의 결과이다. 김정은 시대 북한은 어떻게 당을 건설, 강화하고 정권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논쟁과 실천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인민의 수요,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회주의는 필요 없다는 기본 인식 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제시하였다.

이 담론은 이데올로기의 연속성 유지, 사회 생산력의 발전, 인민생활 수준의 향상, 국가의 정치적 안정 및 사회의 화합 유지를 기본 목표로 당 회의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체제 유지에 집중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발전과 안정 이 두 개념이며 두 개념의 균형은 더욱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국가적 힘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동력은 바로 내부의 역동성을 활용하는 것, 즉 적을 통한 발전과 안전의 정당성 확보이다. 이것은 북한이 교전 중인 적대적인 두 국가를 선언과 함께 ‘지방발전 20×10정책’을 동시에 발표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상술하였듯이 북한은 2019년 12월부터 대미와의 장기적 대결전을 위한 정면돌파전을 제시한 바 있으며, 2021년 3월 제1차 시, 군책임비서 강습회를 통해 향후 15년 내 지방발전을 통한 국가 역량 강화를 강조한 것은 한미와의 중장기적 대결을 위한 내부 역량 강화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시 말해 국방력 강화를 전제로 내부의 문제 해결에 더욱 집중해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국가 구조를 재편성하겠다는 의미였다. 북한이 2022년부터 현재까지 자신들의 최대 위협과 체제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한미의 군사적 위협을 지목한 상황, 올해 최대의 핵전략 자산을 동원한 군사훈련이 예정되어 있는 현 시점이 적의 개념화, 적대 이미지 형성을 통한 체제 결속에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그렇다면 북한이 교전 중인 적대적인 두 국가를 선언과 함께 ‘지방발전 20×10정책’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북한은 자신들의 통일·대남정책 전환을 지방공업 발전이라는 경제·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계기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다. 북한은 핵 개발의 명분으로 인민경제 부분 투자 집중을 통한 인민생활 향상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북한은 2017년 11월 국가핵무력 완성 당시 자신들의 2대혁명전선으로 군수공업과 경공업을 설정한 바 있는데, 그 이유는 국가핵무력이 완성된 시점에서 군수공업 보다는 인민생활과 직결된 경공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김정은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해 나가려는 정책적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군수공업에 비해 지방공업을 중심으로 한 경공업 분야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말대로 “공장다운 지방공장이 하나도 없으며 지역 인민들의 삶과 관련된 지방경제가 초보적인 조건도 갖추지 못한 한심한 상태”였다(로동신문, 2024/1/16: 4).

김정은 위원장은 연설에서 이 정책의 제시 배경으로 지방의 낙후성을 제거하고 전국적 차원에서 지역 인민들의 기본적인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켜 지방 인민들의 숙망을 풀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김 위원장은 당 조직지도부에 지방공업건설과를 따로 조직하고 자신이

직접 책임지고 정책을 수립,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는 바로 현재 지방의 낙후성을 가장 큰 체제 내 위협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였기 때문이었다. 이 정책은 중앙의 집중적인 지원을 전제로 한 것이었기에 기존 지방발전을 전적으로 지방의 책임임을 강조한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정책이었다. 북한은 지속가능한 발전 구조 형성을 위해 ‘지방발전 20×10 정책’이라는 국가재정비 사업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적 리더십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상태로서의 전쟁을 통해 중장기적인 국가재정비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였다.

그렇다면 왜 북한은 이 정책의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을까? 그것은 북한이 2021년 제8차 당 대회와 동년 3월 개최된 제1차 시, 군 책임비서 강습회에서 향후 15년간 지방을 발전시켜 국가역량을 최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의지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 정책에 인민군대 투입을 결정하였으며, 그 부대 이름을 124련대로 명명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남한 사회에서 ‘124’라는 번호의 의미는 북한의 대남 적개심의 상징이자 남한 정부를 전복하려했던 시도의 상징이다. 북한은 1968년 1·21사태 당시 33명의 무장군인들을 남파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을 시도했으며, 그들이 훈련받고 파견되었던 부대가 바로 ‘124부대’였다. 우리 현대사에서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사건, 남한으로서는 대북 적개심이 극도에 달할 수밖에 없었던 동기를 부여했던 숫자, 북으로서는 군사적 모험주의를 통해 다시 한반도에서 상태로서의 전쟁 위기를 재고시켰던 매우 안보적 의미의 숫자였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방발전 20×10 정책’발표 당시 “당과 정부가 더 이상 후에 보자는 식의 태도를 취할 그 어떤 명분도, 권리도 없다(로동신문, 2024/1/16: 4)”고 강조한 것은 북한이 상태로서의 전쟁을 통해 자신들의 최대의 약점인 지방의 낙후성을 해소해 자신들의 발전전략을 정당화시키고 남한과 다른 또 다른 국가로서 생존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해보면, 북한의 주장은 남북관계를 정전협정 직후의 상황으로 환원시켜 전후 복구 건설시기와 같은 수준의 국가재정비를 통해 최고 지도자와 체제의 안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의미이다. 더 나아가 이를 통해 흡수통일, 체제통일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북한이 동등한 자격으로

통일에 참여할 위상과 능력을 갖추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남북을 특수관계로 규정함으로써 야기되는 이중잣대의 문제를 자주권 침해 행위로 인식, 이를 제거하고 최고지도자 및 체제 생존을 위해 철저히 국가이익에 기반해 남북관계를 운영해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북한은 이전까지 국가와 민족,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가치와 이익 추구 행위를 소위 ‘이중잣대’로 인해 훼손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북한이 한미합동군사훈련과 자신들의 미사일 시험발사 모두 자주를 위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한미는 자주, 북한은 위협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발해왔다. 이러한 현실에서 공식적으로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두 적대 국가관계로 현실화시킴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의 절대적 리더십 강화의 필요성을 전제로 국가정체성 강화 및 상호 인정·존중의 관계로의 전환을 시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들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이해된다.

북한이 두 개의 조선, 교전 중인 두 국가를 내세운 것은 기본적으로 외부의 적을 상정한 것이며, 양국 간 국가이익의 교집합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북한의 인식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은 한미 양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이중기준에 대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한다’는 행동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달라진 북한의 입장에서 관성에 젖은 한미의 대북정책의 무용성을 지적하며 정책과 노선상의 우위 점유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미국이 시험발사에 성공한 잠수함 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SLBM)을 폴라리스(polaris)라고 명명했을 때, 북한은 이후 자신들이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잠수함 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명칭을 북극성(폴라리스의 번역명)으로 명명한 바 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의 대북 주적론 및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을 문제 삼으며 남한을 최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자신들의 헌법에 남한에 상응하는 영토 조항 삽입을 지시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셋째, 북한의 변화된 시대 인식과도 연관이 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10년을 ‘혁명의 계승기, 발전기’로 규정한 바 있다. 이후 북한의 시대 규정은 ‘새시대’이다. 새시대는 새로운 시대로 가야 한다는 인식이자 동시에 자신들

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한 진단과 판단, 이게 기반한 문제 해결을 위한 이행 의미한다. 새시대는 기존 구시대 논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겨냥한 분명히 목적의식을 내포한 용어로 이전과는 차별화된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형성한다. 북한 문헌을 통해 정리해봤을 때, 북한이 말하는 새시대의 핵심은 바로 ‘애국’이며, 헌신과 희생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국가안보와 사회안정, 경제발전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관리하는 거버넌스의 구축이 최종 목표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당을 통한 당·국가 관리 능력의 향상, 인민생활 향상, 간부들의 무능 타파, 과학기술 발전에 기반한 자력갱생 진척, 김정은 위원장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의 일색화 등을 지목할 수 있다.

새시대의 애국에 기반한 김정은 위원장의 두 개의 국가 발언은 남북관계에서 남과 북이 서로 특수관계가 아닌 정상적인 국가관계라는 새로운 인식체계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김여정을 앞세워 남한의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수위 높은 비난을 쏟아내며 적대적인 태도로 전환하였다. 자신들의 국가적 이익을 획득하지 못했을 때 기존 보수 정부의 핵심 인사를 중심으로 한 비난에서 보수와 진보 정부를 가리지 않고 수위 높은 적대 발언을 지속하는 것은 기존 단순히 미 제국주의의 앞잡이와 괴뢰로 인식한다기보다, 외교적 차원에서 남북관계를 조율하고 이를 주민들에게도 새로운 인식체계로 자리매김하게 만들기 위한 북한의 새로운 전략의 시작이었다.

다시 말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남조선 괴뢰는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북한에 대항하는 확대된 적대적 타자로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이었다(임수진, 195-196). 북한의 새로운 인식체계는 새시대에 맞는 국가적 정체성 형성을 필요로 한다. 이는 향후 북한이 애국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정체성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국가적 정체성과 현실에 부합하는 이데올로기를 강화, 발전시킬 것임을 예측케 한다(Siniša Malešević, 13-36).

마지막으로 새시대의 규정은 자국 중심의 태도, 강화되는 국가적 자부심, 세계정치에서의 현실적인 인식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국가 역할을 자리매김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북한의 지정학적 인식의 강화이다. 지정학은 종종 강대국과 약소국의 국력을 계산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취급되나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그러나 약소국의 정치지

도자가 자국이 가지는 전략적 지정학적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Annette Baker Fox, 8). 그 이유는 강대국과의 경쟁을 하기 위한 그들의 선택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이고 교전 중인 두 국가를 언급하면서 자신들의 군사력 증강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김정은은 정세 관리와 국방력 강화 간 어떠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았을까? 바로 미중 전략적 경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인식의 변화와 이른바 ‘고래의 꿈’전략 때문이었다(김상범, 2021: 37-38). 북한은 미중 전략적 경쟁을 현 국제정세 변화의 가장 큰 특징으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 한반도에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했다.

지정학은 공간과 장소에 대한 투쟁이며, 반대나 대안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목표를 성취하려는 능력에 초점을 맞춘다는 본질적 특징이 있다(콜린 프린트 지음, 한국지정학연구회 옮김, 2009: 61).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을 둘러싼 정세가 복잡한 것은 자신들이 큰 나라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거나 그들 속에서 끼여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대국을 움직일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김 위원장이 말한 전략적 요충지란 한반도가 주변 강대국의 이익을 조율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을 말한다(지봉철·리성길·리희순, 2014: 10-11). 북한은 국가 안보, 체제 생존, 자주의 과시를 위해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이러한 지정학적 특징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로동신문, 2021/1/9: 3; 2021/10/11: 3). 북한의 이러한 판단은 국력이 강성했던 고구려 시기에도 외세의 침입은 중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로동신문, 2022/7/4: 1).

북한의 이러한 인식을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에 적용해 보면, 북한은 미국과 주변 강대국이 자신들을 새우로 인식하고 있는 현실을 타파하고, 고래가 되길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래의 꿈 전략은 지정학적 재인식과 핵무력 고도화를 통해 신냉전 구도 하 당당한 군사강국으로서 주변국이라는 ‘고래’들과 당당히 경쟁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다시 말해, 북한은 미국이나 중국 등 주변 강대국의 일방적인 힘이 동북아 및 한반도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힘에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중 전략적 경쟁 시대에 북한은 자신들의 지정학적 가치에 대한 재인식을 바탕으로 구조적 압력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을 통해 공세적으로 대응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래의 꿈 전략은 북한의 국제규범 위반과 그들이 가지는 경제적 한계로 인해 주변국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김상범, 114-115).

상술한 바와 같이 북한의 가장 중요한 국가 발전 동력은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이다. 이 전략은 핵과 미사일 관련 기술의 발전을 정책의 최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지역과 전 세계적 차원에서 강대국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열악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핵 능력만으로는 그들이 목표로 하는 지역 강대국이자 전 지구적 차원에서 군사강국으로 자리매김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들이 목표로 하는 고래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주변 강국으로부터 경제적 영역에서 일정 정도의 인정이 필요하다. 북한이 자신들의 국가전략 목표로 강성대국을 설정하고 있으며, 강성대국은 사상, 군사, 경제적 강국임을 상기해봤을 때, 고래가 되기 위해 핵뿐만 아니라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Bruce W. Bennett, ed, 2021: 6). 북한은 이러한 기조 하에 제8차 당 대회에서 제시한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사상과 국방력 강화책을 지속시켜 나가며, 당 전원회의를 통해 경제적 성과를 달성해 정당성을 강화하며 체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넷째, 새시대에 맞는 김정은 위원장 고유의 혁명사상 발전, 즉 사상의 안정성을 통한 최고지도자와 체제의 안정성을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의미도 있다. 북한은 새시대를 김정은 시대로 규정하고 있다(로동신문, 2024/4/24: 1-2). 다시 말해, 선대 수령들의 통일·대남정책의 비현실성과 한계를 지적하고 그들의 업적과 새시대에 맞는 자신의 영도영역을 분리, 이행해 김정은 위원장이 선대 지도자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이데올로기적 권능과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권위가 김일성, 김정일의 그것을 뛰어넘어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선대 지도자들의 정책을 평가하고 해석하는 것은 ‘지도자의 영도 영역’이므로 그 자체가 김 위원장의 영도력 발휘의 과정이자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두 개 국가론은 선대 수령들의 통일·대남정책의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하지만 그들의 사상에 대해서는 계승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현재 북한은 김정은의 혁명사상을 주체사상과 같은 반열로 올려놓기 위한

사상적 정교화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 속에서 한반도에서 우발적인 전쟁을 막고 경제발전을 통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북한 인민들에게 가장 적합한 지도자는 김정은이라는 것을 각인시키고 있다.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 근본리익을 가장 철저히 옹호하는 사상으로서 내용에서 위민헌신을 근본핵으로 하는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되고 구성에서 사상, 이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다(로동신문, 2021/1/10: 3).

김정은의 혁명사상이라는 표현은 통치이데올로기 및 재활성화의 계기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오직 김정은에게서만 체제 발전과 안정의 자원과 동기를 찾으려는 의도, 즉 최고지도자의 영속적 권위를 위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사회주의에서의 통치담론 특히 북한에서는 사상이론적 발전과 체계, 통일성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기획물이기 때문이었다(Ernesto Laclau and Chantal Mouffe, 1985: 62-64). 이것은 북한이 김정은의 혁명사상은 당과 국가의 강화발전을 위한 결정적 담보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로동신문, 2023/4/11: 2).

V. 결론

김정은 위원장의 교전 중인 적대적인 두 국가 선언은 남한이라는 주적 설정을 통해 지난 10년간 자신이 찾아낸 당과 최고지도자의 영구집권의 노후를 개념화하고 정통성까지 부여하면서 당의 운명과 함께 절대자의 위치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주변국들은 이러한 북한의 규정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정책적 변화를 시도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북한은 2024년 5월 24일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0차 정치국 회의를 개최하고 6월 하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 소집을 결정하였다. 2023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당 내 통일, 대남기구 정리, 개편을 지시한

바 있다. 차기 전원회의에서 당 내 통일·대남기구의 재편 결과가 공표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제8차 당 대회에서 당 전원회의에 당 내 기구 신설 및 이후 당 대회에서 승인받는 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 북한은 2021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5차 전원회의에서 당 규약의 일부 내용과 조항을 신설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이 당 전원회의에서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사업부문의 기구들을 정리, 개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라고 강조한 것은 북한이 이전 당 전원회의를 통해 당규약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당 내 기구 신설 및 폐지 기능도 부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므로 당 내 통일전선부의 존폐 여부 등은 당 제8기 10차 전원회의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전선부의 주요 업무가 조총련, 조중총련 및 대남사업이라고 봤을 때, 통일전선부의 명칭을 변경하고 대남사업을 떼어내 당 차원의 대외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로 통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 전원회의에서는 당 내 기구 신설에 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차기 전원회의에서 당 규약 수정에 대해서 논의하고 당 내 기구 폐지 기능을 부여받아 이행한 후, 당 대회에서 제기하여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한반도 주변국들은 남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에서 형성된 특수관계라는 규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아왔다. 그러나 만약 주변국들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 대한반도 정책을 추진할 경우, 한국의 요구가 아니라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철저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우리가 북한의 정보를 얻기 위해 이들 국가를 다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공산당 주요 대외연락부장급 인물이 방북한 뒤 서울에 와서 그 결과를 공유할 것인가? 발표자는 부정적인 견해다. 이러한 외교적 행위는 한국 정부의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지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적극적 행위자’라는 국가 역할 인식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 동북아 역학구조에서 한국 정부가 자율성을 가지고 국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과 대안이 보이지 않고 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외교적, 남북관계에서의 자율성을 확보해 대응 원칙과 기조 수립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북한을 적뿐 아니라 대화의 상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내용의 대북 메시지를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핵전략자산의 상시 전개와 북한의 무력 대응으로 인해 한반도 안보딜레마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위기관리 능력이 필

요해 보인다. 현 남북 및 남·북·미 관계를 봤을 때, 당장의 관계 정상화는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전쟁 방지를 위한 위기관리 능력 배양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대북 대립, 고립전략은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북 고립전략은 의도치 않게 북한을 핵 신흥강국과 라이벌로서 북한을 상대할 수밖에 없는 심각하게 불리한 위치를 양산시켰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고립전략으로 인한 협상의 부재는 북한의 최고지도자와 엘리트들이라는 최소한의 신뢰와 검증이 보장되는 수준 높은 정보의 획득이 아니라 산발적이고 제한된 채널들과의 소통을 통한 정책 수립이라는 매우 애매모호한 정책적 환경을 양산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현재 우리에게 북한의 핵 독트린, 핵의 지휘 및 통제 시스템, 또는 핵무기 안전담보 정책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는가? 라고 반문해봐야 한다. 한미의 대북정책 입안자들에게 한반도가 직면한 수많은 안보 이슈들에 대해서 나온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함께하는 국가안보정책의 추구와 제도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금 강조할 필요가 있다(Van Jackson, 3). 위협의 시대에서 안전의 시대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과 함께 하는 국가안보정책의 추구, 즉 관여와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적인 두 국가” 및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발언은 기존 철저한 주적 및 적대국가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시 말해, 국가재정비 전략을 통해 장기적인 차원에서 대미 협상력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이 남한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같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빠져있지만 한반도에서의 안보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단 체제 관리 비용보다는 평화를 만드는 비용이 더 경제적이라는 믿음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남·북·미를 중심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김갑식 외. 2022. 『미중 전략적경쟁시대 한국의 복합대응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 김진하 외. 2024. 『김정은 정권 대남전략 전환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 김연철. “한반도 전쟁 가능성과 두 개 국가론.” 『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제 209호(2024년 2월 14일), 1-5.
- 김상범. “북한의 두 개 국가론 선언 평가와 의미.” 『IFES 브리프』(2024년 1월 29일), 1-4.
- _____. 2024. 『북한의 핵과 정치권력 변화』. 창원: 경남대학교 출판사.
- _____. 2022. 『북한은 김정은 체제 10년을 어떻게 인식·평가하고 있는가?』.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김태현. 2019. “적대관념과 정권안보: 동독사태와 북한에 대한 함의.” 『국가전략』제25권 제2호, 120.
- 곽인수. 2013.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전개와 변화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병석 의원실·국회평화외교포럼·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의 두 국가 관계 선언과 한반도 군사 위기.” 토론회 자료집 (2024년 2월 1일).
- 오오다케 코지 지음, 윤인로 옮김. 2020. 『정전과 내전: 카를 슈미트의 국제질서사상』. 부산: 산지니.
- 임수진. 2022. “김정은시대 북한의 대외 적대담론 연구.” 『통일과 평화』14집 2호, 196.
- 장윤미. 2023. 『당치(黨治)국가 중국: 시진핑 시대 통치구조와 정치의 변화』.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 전봉근. “김정은은 왜 민족주의 통일노선을 폐기했나?.” 『세종논평』(2024년 1월 22일), 1-2.
- 전재성. 2022. “미래 50년 한반도 국제정치와 한국의 선택.” 『한국과 국제정치』제38권 제1호, 284.

- 정성장. “김정은의 유사시 남한 평정 준비 지시와 남북관계 단절 노선 평가.” 『세종정책브리프』(2024년 2월 7일), 1-25.
- 지봉철 · 리성길 · 리희순. 2014.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혁명활동 교수참고서(고급중학교)』.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성기영. “김정은의 통일노선 전환: 역사적 배경과 의미.” 『이슈브리프』제513호(2024년 2월 19일), 1-8.
- 성정엽. 2020. “칼 슈미트의 ‘정치적인 것’의 개념.” 『민주법학』 제72호, 57
- 하영선 · 김양규. “북한의 대남조선 전환 바로 읽기: 대한민국의 궤멸 vs. 김정은 정권의 종말.” 『EAI 이슈브리핑』(2024년 2월 29일), 1-10.
- 통일연구원. “북한의 대남조선 전환 평가 및 대응 방안.” (통일정책포럼, 2024년 2월 14일).
- _____. “북의 두 국가론과 민족 분리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개원 33주년 국내학술회의 자료집(2024년 4월 1일).
- 카를 슈미트 지음, 김효전 · 정태호 옮김. 2002. 『정치적인 것의 개념』. 파주. 살림.
- 콜린 프린트 지음, 한국지정학연구회 옮김. 2009. 『지정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길.
- 평화재단. 2024. “김정은 위원장의 위험한 한반도 두 국가론.” 『현안진단』제 321호, 1-5.
- “위대한 당중앙의 혁명사상과 불멸의 업적으로 깊이 체득하고 전면적국가부흥의 새로운 승리의 역사를 창조해나가자-각 도들에서 연구토론회 진행.” 『로동신문』(2024년 1월 10일), 3.
- “탁월한 수령의 령도밑에 민족적사변들을 아로 새긴 위대한 승리의 해 2022년-기적적 승리를 안아온 절대적힘.” 『로동신문』(2022년 12월 27일), 4.
- “김정은-혁명의 새 승리를 향한 력사적 진군에서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의 위력을 힘있게 떨치라-청년동맹 제10차대회에 보낸 서한 주체110(2021)년 4월 29일.” 『로동신문』(2021년 4월 30일), 1-2.

- Bennett, Bruce W, Kang Choi, Myong-Hyun Go, Bruce E. Bechtol, Jiyoung Park, Bruce Klinger and Du-hyeogn Cha. 2021. “North Korea’s National Strategy: Looking Beyond Nuclear Capability-Countering the Risks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RAND Corporation*. <https://www.jstor.org/stable/resrep30910.8> (최종검색일: 2023/10/30).
- Fox, Annette Baker. 1959. *The Power of Small States-Diplomacy in the World War II*.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abib, Benjamin. 2010. “Climate Change and Regime Perpetuation in North Korea.” *Asian Survey*. 50(2): 387.
- Jackson, Van. 2020. “How to Engage the Enemy: The Case for National Security Diplomacy with North Korea.” *Special Report*, No. 479: 3.
- Job, Brian L., 1992. “The Insecurity Dilemma: National, Regime, and State Securities in the Third World,” in Brain L. Job eds, *The Insecurity Dilemma: National Security of Third World States*. 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s, 1992.
- Laclau, Ernesto, Chantal Mouffe. 1985. *Hegemony & Socialist Strategy: Towards a Radical Democratic Politics*. London&New York: Verso.
- Malešević, Siniša. 2006. *Identity as Ideology: Understanding Ethnicity and Nationalism*.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Murray, Shoon Kathleen and Jonathan A. Cowden. 1999. “The Role of “Enemy Images” and Ideology in Elite Belief System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3(3): 456.
- Niño, César, Lucas d’Auria and Ángela Cristina Pinto. 2023. “Enemy-based foreign policy as as framework for understanding Russia’s invasion of Ukraine,” *Canadian Foreign Policy Journal*. 29(3): 269-270.
- Yongho Kim. 2011. *North Korean Foreign Policy: Security Dilemma and Succession*. Lanham: Lexington Books.

Abstract

North Korea's Declaration of Two Korean States: Evaluation and Prospects

Kim, Sangbum^{*}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ay attentio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the two state claims by Kim Jong-un, and to analyze the fundamental purpose of North Korea's declaration as a "domestic renewal" strategy through the production of war as a state to remove internal factors threatening the survival of the supreme leader through the conceptualization, formation of hostile images, and development of the enemy. Carl Schmitt's war as a statue gives a very valuable framework of recognition for explaining the situation of two hostile states, two warring nations, with no distinction between wartime and peacetime mentioned by Kim Jong-un. To transition from a danger to a safety era a national security policy with North Korea must be pursued, which includes involvement and intervention.

Key Words: Two Koreas, War as a Statue, Enemy, Inter-Korean Relations, North Korea

논문투고일: 2024. 05. 08.

논문심사일: 2024. 05. 17.

게재확정일: 2024. 05. 25.

^{*}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of Kyungnam University